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인용」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 ○○○동 ○○○-○○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유자로서, 20○○. ○○. ○○. 피청구인에게 ○○○구역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 ○○.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 정보부분공개 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 ○○. ○○. 피청구인에게 정보부분공개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통지된 정보 중 ‘감정평가서’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는 공개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제3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와 제3자의 의견청취 결과 사업주체(○○○구역 지역주택조합)로부터 비공개 요청이 있었다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정보 중 이 사건 토지(청구인 소유)의 정보에 한하여 공개하는 이의신청 부분인용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 전부를 공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개대상 정보 중 일부만을 발췌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범위를 임의대로 축소하여 공개하였다.

나.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중 공개하지 아니한 부분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없는 만큼 제3자가 소유하고 있는 상세지번, 평가금액, 인적사항 해당 부분을 가리고 나머지 부분을 모두 공개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감정평가서는 ○○○구역 지역주택조합의 정보공개신청에 대한 의견청취결과 비공개 요청이 있었고, 감정평가서에는 타인의 부동산 주소, 소유주, 부동산의 감정평가 세부기준 및 인근 부동산의 평가사례, 감정평가금액 등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세부내역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제3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청구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청구인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공개한 만큼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1조, 제18조, 제21조

나. 사실관계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2) 청구인은 20○○. ○○. ○○.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인천 ○○구 ○○동 ○○○-○○번지 일대를 사업부지로 하는 ○○○구역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의 감정평가서,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배치도, 공사설계도서’를 공개하여 달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 ○. ○○. 청구정보 중 ‘배치도 및 단위세대 평면도’의 정보는 공개하되, 나머지 정보는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하는 정보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

3) 청구인은 20○○. ○○. ○○. 피청구인에게 정보부분공개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통지된 정보 중 이 사건 정보인 감정평가서에 대하여는 공개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제3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와 제3자의 의견청취 결과 사업주체(○○○구역 지역주택조합)로부터 비공개 요청이 있었다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정보 중 이 사건 토지(청구인 소유)의 정보에 한하여 20○○. ○○. ○○.을 정보공개 실시일로 하여 공개하는 이의신청 부분인용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이에 청구인은 20○○. ○○. ○○. 이 사건 정보 중 제3자가 소유하고 있는 상세지번, 평가금액, 인적사항 해당 부분을 가리고 나머지 부분을 모두 공개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판 단

1)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및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각 호의 어느 하나 중 제6호에서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에서는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는 ‘피청구인이 2000. 00. 00. 청구인에게 한 정보부분공개 결정 처분은 공개 대상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 위법·부당하므로 「0000구역 주택건설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감정평가서 원문 중 청구인 이외의 자가 소유하고 있는 평가대상 물건에 대한 상세지번·평가금액, 인적사항 해당 부분을 가리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공개」하는 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여 부분 공개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2000. 00. 00. 청구인에게 정보부분공개 결정 처분은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이를 선행하면 이 사건 정보 중 이 사건 토지(청구인 소유)의 정보에 한하여 2000. 00. 00.을 정보공개 실시일로 하여 공개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을 주장하며 이 사건 정보 중 개인 정보 등을 제외한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 의무이행을 구하는 의무이행심판청구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먼저,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이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이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

고 2008두8680 판결 참조).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4두5477 판결 참조).

위 관계법령 등에 따르면, 정보를 생산·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 요청을 받으면 정보공개법의 목적 및 취지에 따라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제3자와 관련이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당해 공공기관이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이상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다음은, 이 사건 정보인 감정평가서가 ① 부동산감정평가표, ②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③ 토지가액산출기초표(토지가액산출근거), ④ 토지감정평가조서(토지평가조서), ⑤ 물건평가조서(건물평가조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들 정보가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인지를 살펴보건대,

이 사건 정보 중 위 ①, ②에 해당하는 정보는 위 정보만으로 성명·주민등록번호, 지번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제3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 중 위 ③, ④, ⑤에 해당하는 정보는 청구인 이외에 타인의 성명, 소재지, 지번, 개인의 감정평가금액 등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뿐더러 위 개인에 대한 정보는 공개할 경우에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해당하는 정보 이외에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중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 ①, ②에 해당하는 정보를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이 사건 정보 중 위 ③, ④, ⑤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인 위 ①, ②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